

시론

오 주 섭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공동대표

현재 진행형인 적반하장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회초리를 듣다는 뜻이다. 중국 고전에서 유래한 이 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꾸짖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비유한다. 공동체 윤리를 무너뜨리는 태도를 경계하기 위해 오랫동안 쓰여온 말이지만, 오늘의 정치 현실 속에서 이 사자성어는 유감스럽게도 현재진행형이다.

12·3내란 사태, 대한민국 현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12·3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현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문민통제와 권리 분립을 위협했고, 헌법 위에 군과 권력을 세우려 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조작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거나 “야당과 언론의 과정”이라는식의 주장을 반복해 왔다. 현정 질서를 훼손해 놓고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궤변(詭辯)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 역시 다르지 않다. 지도부 인사들은 12·3 사태에 대한 사과나 정치적 단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이미 지난 일”, “대통령의 통치 행위, 선동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표현으로 일축하고 있다. 심지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두고 “정치 보복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앞세우며, 사법 절차 자체를 훼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불을 지른 사람이 화재 원인을 따지는 시민에게 왜 소란을 피우느냐고 되묻는 형국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다 잊는다?

윤상현 의원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은 다 잊는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러한 인식을 짐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국민을 주권자가 아닌, 잠시 분노했다가 이내 잊어버릴 존재로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그 반대를 증명해 왔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아픔을, 6월 항쟁의 합성을,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촛불로 광장을 밝힌 시민의 선택을 잊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건은 시간이 아니라 시민의 기억 속에서 심판받아 왔다. 만약 국민들이 45년 전,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 추운 겨울날 새벽에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반역의 무리인 전두환 일당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시간이 지나도 국민들은 잊지 않았다.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역사적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궤변과 요설로 모면 못해 정치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윤리 위에 서야 한다. 궤변과 요설로 국면을 모면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신뢰를 대신 할 수는 없다. 향어기에 금이 갔는데 곁에 화려한 문양을 덧칠한다고 물이 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수습은 반성과 사과, 그리고 분명한 단절에서 시작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권력의 선택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집단적 판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적반하장의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다시 묻고 다시 기록할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드는 사회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사회. 그것이 민주공화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가 국민들에 담합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양심이 존중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이 이기고 악이 눈 앞에서 패배하는 사회,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결국 ‘얼마 만큼 잘사느냐’가 아니라 ‘얼마 만큼 바르게 잘사느냐’입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만 민주정치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국민들은 국가 위기 순간마다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이제 정치가 국민들에게 답할 때다.

本土 說

전남 의대 전제 목포·순천대 통합 투표 부결 대략난감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구성원이 전남권 최대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에 반대했다. 교육부 심사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와 양 대학은 당혹해하고 있다. 2027년 의대 개교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적 숙의의 과정이 부족한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는 국립 의대의 신속한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이 회동해 2027학년도를 목표로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하는 것은 물론, 동부·서부권에 각각 500명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 설립에 뜻을 모았다. 전체 의대 정원 규모를 다루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결정도 금명간 나을 전망으로, 내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두 대학이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틀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연한 통합’을 통해 각 캠퍼스가 현행 체제와 동일하게 독립성·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점도 내세웠으나 뜨거운 찬반 결론이 다시 한번 낚이는 것인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과 반대가 우세했다. 의대와 무관한 경우, 공감대 형성이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내년 1월 중순 교육부 심사 일정에 맞춰 재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동력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대학 간 통합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 의료 취약지이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의대는 심각한 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다. 지역사회와의 최대 관심사다. 오랜 숙원인 셈이다. 대학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에 앞서 의대 유치를 위한 필수 과제고 초광역 거점으로 도약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대학에 나란히 선정된 만큼 시너지 효과 또한 상당하다.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이제 명정부의 국정과제다.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혁신 국립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연계돼 있다. 의대 설립을 절실히 바라는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다시 한번 낚이는 것인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극명하게 엇갈린 광주·전남 공공기관 2025년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시가 지난해보다 한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4등급으로 한단계 떨어졌다. 기초자치단체는 보성군과 해남군이 1등급, 광주 북구가 2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과 광산구는 4등급에 포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4등급, 전남도교육청은 한단계 하락한 4등급이다.

최하위 5등급이 없어 사실상 꽂찌다. 광역의회에선 전남도의회가 2등급, 광주시의회는 3등급에 자리했고, 기초에선 보성군의회가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전남개발공사가 최고 1등급, 광주도시공사는 3등급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소재 기관별 회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청렴노력도 우수사례로 제시되기도 했다. 공사는 특화 시책으로 개발 인·허가 승인지역에 대한 임직원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 직원 및 직계가족 인적사항을 등록, 토지소유자와 대조해 검출하는 구조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동행변호사 제도 및 AI 청렴챗봇을 구축하는 행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반해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나란히 하위권에 포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단체는 청렴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필수적 기반이지만 양 교육청 모두 시·도민들에게 감사 전반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수의 공익신고와 제보가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면 거센 질타를 받았다.

올해 종합청렴도는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과 공직유관단체 등 5개 유형 모두에서 상승했다. 총 450곳의 평균 점수는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이다. 국민권익위는 금품·향응·편의 등 전통적 부패 분야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기관들 역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전남 함평군이 두단계나 뛰었다. 더 자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염증히 받아들여야 한다. 부패 근절과 청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온누리 디카시 광장

손을 놓다

하재원

사랑하기에 품었고
더 사랑하기에 스스로를 깨뜨려 놓아주었다
어머니의 허물어진 자리
거기서 비로소 나의 생은 피어났다



※시작 노트

당신의 생을 찢어 문을 만드시고
나를 밀어내던 그 시린 손길이
실은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나의 색깔로
익어갑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을 삽니다.

/광주디카시인협회 제공

최재수첩

정 해 선
지역특집부 국장

지방자치 본질은 실용주의와 주민통합

입버릇처럼 통합을 약속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지역사회는 봉합되보다 더 깊게 양분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명정부의 취임과 함께 천명한 실용주의와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이방향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그대로 투영돼야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성과는 현란한 공약이나 정치적 언변이 아니라, 주민을 나누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 즉 ‘불편부당(不偏不黨)’에서 갈린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지난 선거 때 주민통합과 공정 행정을 약속해 놓고 편파기와 가족을 포함한 측근들의 이권 쟁기기 논란, 복복은 ‘주민 편파기 행정’에 대한 피로감과 염증이 극에 달해 있다. 선거 과정에서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 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부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